



환경부, 하수처리장 적정투자 유도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 준수를 의무화하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통합영향평가법으로 이관, 환경성검토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운영 및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하반기에 추진할 환경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내용을 준수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통합영향평가법으로 이관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지자체의 경우 처벌하기로 했으며 하수처리장 투자단가가 실소요액보다 과도한 점을 감안, 설치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시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투자의 적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2002년도 지방양여금 배정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및 기본설계 용역 추진실적 등을 감안, 예산반영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으며 환경관리공단에 하수관거정비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기술

최근 환경부의 연도별 자치단체별 신고내용별 쓰레기투기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접수된 쓰레기투기 신고는 모두 3만7,018건으로 이중 쓰레기 담배꽂초 무단투기가 2만1,956건(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규격봉투 사용 쓰레기 배출 1만2,359건(33.4%), 불법소각 2,085건(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원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비위생매립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 실태를 정밀조사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010년까지 총 97개 매립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처리장 방류수에 생태계 위해 특성

공단이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정부의 수질기준이 유기물질 중심으로 돼 있어 독성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박양수 의원(민주당)은 지난 9월 11일 환경부와 지방환경관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화학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8월28일부터 9월초까지 중량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 처리장의 방류수를 대상으로 독성시험을 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처리장은 안산하수종말처리장, 대구성서산업단지폐수처리장, 동두천 피혁

단지폐수처리장, 수도권매립지침출수처리장 등이며 시험방법은 어류(송사리) 독성시험,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개구리밥 독성시험 등이 이용됐다.

쓰레기포상금 신고 연 3만7,000건 접수

쓰레기·담배꽂초 무단투기 최다

쓰레기 포상금제도를 통해 연간 3만7,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이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액도 5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의 연도별 자치단체별 신고내용별 쓰레기투기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접수된 쓰레기투기 신고는 모두 3만7,018건으로 이중 쓰레기 담배꽂초 무단투기가 2만1,956건(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규격봉투 사용 쓰레기 배출 1만2,359건(33.4%), 불법소각 2,085건(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고된 3만7,018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절반에 못미치는 1만7,704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5,956만7,000원에 이른다.

자치단체 하수슬러지 처리 비상

하수처리장의 슬러지가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매립이 전면 금지되고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투기마저 금지될 예정이어서 각 자치단체의 슬러지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월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슬러지 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이 2003년 7월 공식 발효되고 런던협



약의 96의정서가 3-4년 이내에 발효돼 해양 투기마저 규제된다.

광주시는 광주 및 송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간 발생하는 슬러지 5만9천여t을 지금까지 지 서해에 버려왔다.

전남도도 지난해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1만8천여t 가운데 5천여t을 바다에 버리고 나머지는 매립해 왔다.

서울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연간 발생하는 슬러지 176만6천t 가운데 115만6천t(65.5%)은 바다에 버렸고 다음은 매립 43만4천t(24.6%), 소각 9만2천t(5.2%), 재활용 8만2천t(4.6%) 등의 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하수슬러지 등의 투기로 인해 매년 적조가 되풀이되는 등 해양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 도입

태양에너지, 풍력, 조력, 소수력 등 대체에너지 설비 인증제도가 도입돼 인증을 받지 않고 관련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된다.

산업자원부 지난 9월 8일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에너지설비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급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비의 성능과 적합성을 인증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 관련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을 받지 않고 대체에너지설비를 제

환경부는 지난 9월 9일 지역별 환경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전북, 충북, 경북, 경남 등 4곳에 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신설되는 환경센터는 지역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지역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조·수입하거나 기술기준을 위반해 대체에너지발전사업을 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사업장 25% 유해물질 기준초과

상당수 사업장에서 납과 수은, 카드뮴, 분진 등 발암물질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이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9월 7일 오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체 측정대상업체 2만5천75개소 가운데 6천440개소(25.7%)에서 인체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었으며 133개 사업장의 경우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특히 S급속은 발암물질인 납이 기준치를 36배나 초과했고, D사업장과 B형광등은 분진과 수은이 각각 기준치를 16배, 4배 초과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의 지역별 분포는 경인지역이 1천718개소, 부산 1천702개소, 대구 1천606개소, 대전 660개소, 서울 238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환경기술센터 4곳 신설

환경부는 지난 9월 5일 지역별 환경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전북, 충북, 경북, 경남 등 4곳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신설되는 환경센터는 지역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지역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폐기물 매립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등 지역 환경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환경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북 등 4곳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광주, 제주 등 2곳에 추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취소 사례 많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정기점검을 면제받는다든가 점을 악용해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6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양수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 이후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됐다가 범위반사실이 적발돼 지



정이 취소된 사례는 9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말 현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108개다.

96년부터 98년까지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되고 2000년에도 3년간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됐던 SK㈜(울산시 고사동)는 정기지도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특혜를 악용,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배출허용기준(20ppm)을 훨씬 넘는 47.8ppm의 폐수를 방류했다가 검찰합동단속반에 걸려 작년 7월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또 지난 98년 친화기업에 지정된 ㈜두산전자 증평공장(충북 괴산군)도 오염물질인 노르말렉산을 허용기준(5ppm)보다 훨씬 높게 배출했다가 환경개선이행상황 평가시 적발돼 작년 6월에 지정이 취소됐다.

아울러 99년 8월 친화기업에 지정된 인천정유(옛 한화에너지·인천 원창동) 역시 폐수 108t을 무단방류했다가 인천시 서구청의 야간순찰조에 적발돼 지정되지 불과 4일 만에 지정이 취소됐다.

이외에도 제일제당 김포공장과 두산기계 병점공장, 두산유리 마산공장, 울산화력발전처, 제일모직 여천공장, 한화종합화학 여천1공장 등 주로 대기업들이 환경친화기업체에 지정됐다가 중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업소 무더기 적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환경오염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환경오염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전국의 9천248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킨 857개소(9.3%)를 적발, 의법 조치했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전국의 9천248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킨 857개소(9.3%)를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한 동우섬유㈜ 평택공장, 대상사료㈜, ㈜홍일 등 333개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위반내역을 보면 무허가 운영 257개(30%), 배출허용기준 초과 219개(25.6%),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85개(9.9%), 기타 296개(34.5%) 등이다.

환경보전지역 다룸도 조경대상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 생태계 보전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과 관련한 다툼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분쟁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존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이나 이 지역의 관리와 관련된 다툼도 환경분쟁의 범위에 추가,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업무를 시·도에서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해 지방의 분쟁조정 업무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포천군 영북면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경기도 포천군은 한탄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영북면 문암리 237 일대 9천830㎡ 부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모두 160억원을 들여 오는 12월 착공, 2003년말 준공 예정인 영북 하수종말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4천으로 처리시설의 지중화와 함께 주민편의 시설인 축구장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파주시, 곡릉천변 하수처리장 건설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곡릉천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다.

지난 9월 11일 경기도 파주시에 따르면 통일동산과 운정택지,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 등 곡릉천 인근에 주거 및 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원활히 처리키 위해 곡릉천변인 탄현면 법흥리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키로 했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환경부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이어 내년 3월까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로(연장 6km) 건설에 착수, 오는 2003년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환경부, 수도권매립지에 환경벤처단지

수도권매립지에 환경기술의 산업화를 전담 지원하는 환경벤처단지가 오는 2004년까지 조성될 전망이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기술 개발기업의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업무·연구시설 및 실험기능을 갖춘 환경벤처단지를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연구단지내에 신규 확충키로 했다.

그동안 환경분야 기술개발은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져 실제 산업으로 연계·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여왔으나 환경벤처단지 조성으로 개발기술의 실용화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벤처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키로 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축건물 절수형 설비 의무화

지난 9월 29일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들

지난 9월 29일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들은 수도꼭지의 경우 1분당 사용수량 9.5ℓ 이내, 대변기(세척밸브부착형)의 경우 1초당 사용수량 15ℓ 이내의 절수형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은 수도꼭지의 경우 1분당 사용수량 9.5ℓ 이내, 대변기(세척밸브부착형)의 경우 1초당 사용수량 15ℓ 이내의 절수형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제출한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 국민들의 물 사용량을 줄여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하수도 정비에 5조7천억원 투입

오는 2005년까지 전국의 하수도 정비에 5조7천억원이 투입되며 하수도 보급률도 현재의 65%에서 2005년 80%로 크게 높아진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의 하수관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면서 168개 지자체와 협의, 전국에 하수도 2만4천61km를 신설 또는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우리나라 하수도의 64%가 빗물이 함께 섞여 들어오는 합류식으로 돼 있어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하수도 유입부를 철저히 조사해 계곡물이나 하천물이 들어오는 곳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외에 하수도 정비를 위해 장기적인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이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하수도 정비기법 개발을 위해 잠실수중보와 팔당지역 등에서 시범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부과금 28%만 징수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할 경우 부과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아 배출부과금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지난 8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 오세훈(吳世勳, 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540억5천800만원이 부과됐으나 156억5천300만원만 징수돼 징수율이 28%에 그쳤다.

지난 96년의 경우는 279억2천200만원 중 97억1천900만원, 97년에는 519억8천700만원 중 286억5천400만원, 98년은 670억9천100만원 중 343억9천100만원, 99년은 617억3천500만원 중 253억6천900만원만 징수됐다.

오 의원은 "미수납액 중 상당금액이 장기체납된 것으로, 불납결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장기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질평가시 생물학적 기준 적용 전망

앞으로 하천 등의 수질을 평가할 때는 생물종의 서식이나 다양성 같은 생물학적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연만 환경부 수질정책과장은 지난 8월 22일 경기도 양평군 남한강연수원에서 열린 환경정의시민연대 주최 <한·중·일 친환경적 상수원 관리정책 및 지자체, NGO 활동>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상수원 관리정책의 방향에 관해 주제 발표했다.

정 과장은 이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하천이나 호소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이화학적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생물종 서식이나 다양성 여부로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하천생태계의 총체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또 배출허용 기준제로는 특정지역에 오염업소가 많이 밀집돼 있는 경우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기 힘들다면서 배출시설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수질유해물질의 관리항목이나 배출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강화하고 배출량 유출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상수원 주변 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은 은행연합회 등에 명단이 통보돼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거래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했을 경우 횡수에 따라 가산금이 무겁게 부과되며, 징수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상향조정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금융거래 제한 체납시 증가금도 부과

이달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은 은행연합회 등에 명단이 통보돼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거래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했을 경우 횡수에 따라 가산금이 무겁게 부과되며, 징수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상향조정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체납을 줄이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기금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 774만여건, 4천93억여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이 가운데 632만여건(81.6%), 3천418억여원(83.5%)만 징수됐다.

4대강 하수 방류수질기준 강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장균군 항목이 신설되는 등 4대강 수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8월 20일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장균군 항목(3천개/ml)을 신설하는 한편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잠실권역 하수 처리장에 적용되는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4대강 수계(한강상류,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이어 기타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잠실권역의 경우 총질소 20mg/l, 총인 2mg/l 인 반면, 나머지 지역은 이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대장균군 기준은 어느 곳에도 없다.

대장균군 항목까지 포함된 방류수 수질기준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잠실권역이 내년 1월부터, 4대강 수역은 2004년, 기타지역은 2008년부터 각각 시행된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다.



환경평가사 시험 특강 실시

문의 :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02)852-2291